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칠레, 에너지전환법 시행(주칠레대사관)

- 칠레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(발전소, 변전소, 송전 및 배전망) 안정성을 위한 송전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 보리치 행정부는 2023.7월, 송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, 상·하원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21,721호로 관보에 게재(2024.12.27)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됨.

- **(배경)** 공급관리 측면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력의 수요예측 및 공급제어 관리에 어려움 발생

- **(내용)** △에너지부, 국가에너지위원회(CNE)*, 국가전력조정기구(CEN)**의 역할 조정을 통한 송전 확장 프로세스 효율화, △송전 확장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, △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려 등

* Comision Nacional de Energia(CNE): 전력 분야 가격·요금 분석 및 필요한 법적·규제적 기준을 제안하는 기구

** Coordinador Electrico Nacional(CEN): 국가 전력 시스템의 운영 조절 및 송전 시스템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기구

- **(기대효과)** 효율적인 송전망 확장 및 강화를 통해 재생·청정 에너지가 국가전력계통망에 성공적으로 포함되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, 나아가 2022.6월부터 시행된 칠레 기후변화기본법(Ley Marco de Cambio Climatico, LMCC)에 따른 2050 탄소중립 및 NDC(온실가스 감축목표) 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◆ 스위스 연방각의, 파리 협정에 따른 신규 감축 목표 승인 (주스위스대사관)

- 스위스 연방각의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65%를 감축하고, 2031-35년 평균 59%를 감축할 계획이며, 이는 주로 국내 조치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발표함.
- 동시에 스위스의 장기적인 기후 전략에 관한 법률인 기후혁신법, 개정 이산화탄소법, 전기공급법 등에 규정된 기후정책 관련 조치도 승인

◆ 스위스, 환경책임 헌법 개정안 부결(주스위스대사관)

- 스위스가 2.9(일) 시행한 국민투표 결과, 청년 녹색당이 주도한 환경책임 헌법 개정안이 반대 69.75%로 부결됨(투표율:38%).

※ 헌법 조항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자 과반수 및 칸톤(州)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나 모든 칸톤에서 법안 부결

- 스위스 연방각의와 연방의회는 동 헌법안이 요구하는 내용이 지나치다고 평가하여 지난 1.19(일)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결을 권고하였고, 사전 설문조사 결과 부결 예상

- 룩스티 스위스 환경장관은 2.9(일) 기자회견에서 금번 투표 결과가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에너지 전환 등 조치가 필요한 속도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함. 끝.